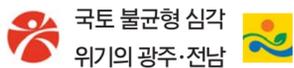


수도권 이어 '충청권 블랙홀' 현상 공공기관 이전 낙후지역 배려해야



<5> 민주 시도당위원장 제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은 15일 광주일보 인터뷰에서 수도권 중심의 국토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공통 인식 아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3면>

두 위원장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추진 예정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제2차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 동반 성장을 위해선 사·도 공동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행정이 앞장서서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로부터 전향적인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경우 "정부가 서두르는 감이 있다. 국

대전·충남에 혁신도시 가능
나주는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정부, 행정수도 서두르지 말고
국토 균형발전 함께 진행을

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 더해 범 수도권으로 자리 잡는 충청권 쏠림 현상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전남과 같은 소멸위기 지역과 공공기관이 적게 배정된 지역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대전과 충남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도시 조성이 가능해지면서 충청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혁신도시를 품은 나주시마저 올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는 소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두 위원장은 시도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는 "사·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관(官)이 아닌 지역민 중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송 위원장은 영국 런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역민의 참여와 관심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런던광역정부가 런던시와 주변 32개 지자체를 통합할 당시 상향식, 자발적, 지역주도의 분명한 기준을 세운 바 있다"며 "통합 제안은 지역 리더에 의해 촉발됐다고 하더라도 통합의 과정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도 행정 통합을 위한 정책 연구와 주민 공감대 확보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하게 지자체장을 1명만 뽑자는 건 의미가 없다. 정책 연구와 비전 제시를 통해 정부에 제도적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도민의 공감대를 얻어낸 뒤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줄속 추진을 경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19 백신 만들기 끝까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 성남 소재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이진세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팀장으로부터 연구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발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치료제는 올해 안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 완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시·도 통합 단계적 추진을"

도의회서 첫 공식입장 밝혀
이달 중 이용섭 시장과 회동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이슈에 대해 "시·도 통합에 따른 장단점, 시너지효과 확보 방안 등을 충분히 연구하고 민선 8기에 공론화를 거쳐 본격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사·도 행정통합 이슈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이용섭 광주시장과 원포인트 회동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이민준(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사·도 행정 통합에 대한 기본 원칙, 접근법, 추진 시기 등 자신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지난달 10일 이 시장의 행정통합 제안에 대해 "광주시, 전남도는 한꺼번에 공동 운영체제로 그동안 통합에 대해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면서도 "다만 과거 2차례 실패 경험이었다. 또한, 행정보다는 사·도민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앞

서 시민단체, 의회, 도민 의견 수렴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관(官)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통합 논의 추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자치권 아래 추진이라는 행정통합에 대한 자신의 기본 원칙도 공개했다. 김 지사는 "행정 통합 기본 원칙은 사·도민의 화합과 소통,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소수의견도 존중하며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광주와 전남이 모두 윈윈하도록 진행해야 하며, 분열과 일방주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단순한 행정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정부 지원을 받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강력한 한 자치권 아래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기존에 밝혀왔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행정 통합 추진은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하여 통합에 따른 장단점, 시너지효과 확보 방안, 절차 등을 충분히 연구하게 하고 2단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2단계 접근법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공론화 과정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민선 8기에 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과거 2차례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북을 포함한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완전 통합이 어렵다면 경제 통합으로 (부·울·경에서 추진 중인) 메가시티 경제공동체로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전북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며 "어차피 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고 발전은 곧 경제 발전을 이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다음 달 말 개최 예정인 광주전남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안전으로 다룰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통합문제를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다룰 경우 통합의 순수성이 왜곡될 수 있다"며 "통합 문제와 다른 문제를 바꾸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 지사가 이달 중 행정 통합 논의를 위해 이 시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지사의 회동을 거쳐 통합을 둘러싼 견해 차이 등이 명쾌하게 정리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전공대 특별법 발의, 정상개교 토대 마련 여야 극심한 갈등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관심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1일 개교와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부족했던 교사(연구시설) 문제로 개교 차질이 우려됐지만 이를 뒷받침 할 법률이 통과되면 정상 개교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정상 개교를 위한 해결책으로 손꼽히는 이 법안이 여야 갈등 속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15일 한전공대의 설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기존의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바꾸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과대는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에너지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학기술 인프라로서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 성장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축으로서 향후 광주·전남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에너지밸리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과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산업에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R&D거점이자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며 "학교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훌륭한 기반을 다지는 의의도 큰 만큼, 여야를 뛰어넘어 협력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August, 2020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IT, 벤처, 스타트업, 1인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공)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 지상-창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

※ 본 홍보물의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 CG 등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주체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금감면 등 정부정책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법정감정인(위)을 사용합니다. ※ 약탈방역, 미디어 파사드는 예정된 시설이므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입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오픈중
T.372-6666
모델하우스: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